

인터넷 시대의 언론 영역과 언론중재

박 기 성

(경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I. 문제의 제기

“언론”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부담없이 사용할 만큼 듣고 말하는 너무나 자연스런 일상적인 어휘로 정착되었다. 우리의 오랜 언어 사용 사례를 살펴보면 이미 言論이라는 한자 어휘가 사용되어 왔고 개화기 이후 언론은 서양 사상에 힘입어 개화 사조를 구축하는 과정에 새로운 인식이 성립된 것이다. 개화기에 간행된 신문, 학술잡지, 신소설에서 용례를 찾아보면 언론은 평론 내지 체계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서양의 speech에 상응하는 번역어로 “언론”을 채택한 것이다. 언론은 언어 표현 행위인 언설, 평론, 담론, 논설, 언지 등 다양한 어휘가 있지만 언론으로 선택한 것은 언어적 표현 행위 중에도 가장 차원 높은 수준의 어휘 때문으로 추정된다.

언론이라는 말은 일제 강점 하에서부터 신문 잡지를 언론으로, 제작하는 기관을 언론사 또는 언론기관으로, 종사하는 사람을 언론인으로 부르면서 우리 사회에도 익숙해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 보다 앞서 개화운동을 한 일제가 서양의 신문 사상과 제도를 정착해가는 과정에 言論이라는 말을 사용해온 경향을 보면 공중이 언어 문자로 의사 표현하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신문지를 통하여 논평하고 의사를 밝히는 행위를 언론으로 규정하였다. 한국의 개화기의 신문이나 잡지에서도 언론은 신문지 보다는 여기에 의사 표현하는 행위를 지칭한 것이다.

해방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점차 언론이 이러한 언어 문자 표현 중심의 언론에서 신문, 잡지 등을 언론이라는 말로 사용하기 시작한다. 방송은 해방이후까지도 언론으로 지칭되지 않았지만 60년대 이후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대중보급이 이루어지고 일상생활에 실용화하면서 점차 언론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한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어휘의 활용은 점차 언어 문자의 표현 중심에서 이를 담는 그릇인 매체 중심으로 사용의 초점이 확대된다. 공식적인 법제도로 대중매체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계기는 3공화국의 언론윤리위원회법, 5공화국의 언론 통폐합 이후 제정한 언론기본법에서 공식화 한다. 이제는 차라리 신문, 방송, 또는 대중매체라는 말 대신에 언론이라는 말을 더 자연스럽게 사용한다. 사회적 인식의 전

환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소치로 해석될 수 있다.

디지털 매체가 대중화 되면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매체가 가상공간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기존 언론과 인식의 상충이 일어난다. 기존 신문과 방송이 인터넷으로 연장되어 언론의 영역이 확장되면서도 가상공간에서의 신문 방송 또는 언론이 될 수 있는가에 이견이 제기된다. 디지털 기술에 기초한 인터넷의 보급으로 형성된 표현의 공간이 사이버 커뮤니티라는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언론”의 개념에 대한 인식의 혼돈이 야기된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인터넷 신문은 언론이 될 수 없다는 논쟁이 가열되면서 언론의 영역 문제는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인터넷 언론의 실험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반론 제기와 함께 이제는 인터넷 언론, 또는 사이버 언론으로 공인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왜 언론이 되어야 하는지 타당성의 제시에는 비교적 소극적이다. 이제 “인터넷 언론”이라는 말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지만 어떠한 차원에서 언론으로 규정할 것이며 앞으로 언론 영역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기존 신문이나 방송이 인터넷으로 연장되어 실시간 정보를 전달하고 인터넷 망이 부가가치 통신의 자격으로 인터넷 방송, 인터넷 신문, 대화방, 토론방, 공공기관의 홍보 포털 사이트 등 다양한 양식으로 실험 시대를 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언론을 어떻게 제도화 할 것이며, 이에 따른 규제 장치를 어떻게 마련하고 공중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공중의 보호 활동의 한 영역인 언론 중재의 피해 구제 영역 역시 이러한 영역 설정에 따라 확대 조정 할 뿐 아니라 제도 장치도 개선되어가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과제이다.

언론의 영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언론으로서의 가능성과 한계를 달리 해석할 수 있다. 언론 영역이 달라진다면 언론 중재 역시 달라지기 마련이다. 언론 중재의 성격과 방법 역시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안에 착안하여 (1) 언론의 영역은 어떠한 생태로 계보화 되어 왔으며, (2) 인터넷 언론을 어떠한 근거에서 규정할 것이며, (3) 이러한 언론 영역 확장 시대에 대비하여 언론 중재 활동은 어떠한 보완이 필요한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생태구성의 관점

본 발제는 흔히 기존 접근이 시도해온 구조기능적 또는 역사적 접근을 보완하기 위하여 생태구성적 관점을 적용한다. 전자가 가지는 한계는 보편성을 강조한 나머지

지 사회가 가지는 상대적 고유성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다. 생태구성이란 모든 사회문화적 현상은 인간 생활과 함께 생명을 가진 상태로 지속 전송된다는 시각에 입각한다. 매체 역시 사회의 구성원이 개발하고 실용하는 정도에 따라 생명을 가지고 지속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언론, 출판, 정보 등 본 발제문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개념 역시 언어로서 의미의 계보화 내지 지속되는 상태로 생태가 유지된다고 본 것이다.

생태구성의 입장에서 보면 첫째는 자생 생태와 이식(移植) 생태로 구분해볼 수 있다. 사회 내부에서 발생한 경우가 자생 생태이며 외국으로부터 사상이나 문물을 이식해온 경우는 이식 생태이다. 문물은 언제나 멈추어 있지 않고 사회와 시대에 따라 생명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공간을 넘어 확산되는 시공간성이 있기 때문에 현상의 의미를 찾아보기 위하여 양자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언론”이라는 말은 이미 한자문화권에서 있어온 말이다. 그러나 중국 또는 일본을 경유하여 서양의 speech, press 사상과 함께 들어오면서 새로운 체질을 갖추어 가게 된 것이다. 언론이라는 말이 한국 사회에 있어 왔으나 서양의 사상을 수용하는 과정에 새로운 변용상이 성립된다. 외국의 speech, press의 입장에서 한국의 상황을 설정하는 외래적 생태시각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의 언론이 외래적 특성과 만나면서 어떠한 체성 변환이 있어 왔는가를 자주적 자세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계의 접근에서 중요한 점은 이식되는 외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현상을 관찰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입장에서 이국적 특성을 수용하여 어떻게 정착하는가에 맞추어 자율성을 제고하는 자세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둘째는 계보의 시각에서 설명을 시도하는 점이다. 생명을 가진 것은 계보를 이루어 세대에 따라 번식 성장 변종 또는 사멸의 순환 주기를 가진다. 이러한 현상 자체를 그대로 족보화 하고, 생물학에서 계통도를 그리듯이 사회 내에서 성립되는 현상과 의미를 계보화 함으로써 자연스런 그대로의 의미의 계통을 살릴 수 있다. 사전에서의 의미 규정 시도는 구조적 또는 역사적 관점에서 의미의 색인 체제로 되지만 사회, 문화, 시대의 상대성을 살리는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는 개념의 분석에서 추정태와 실용태로 구분하여 계보를 파악한다. 언어의 표현이 성립된다는 것은 개인이나 사회의 인식이 성립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과거 역사적 사실로 소급해갈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상은 있으나 아직 언어로써 어휘화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실재에 대하여 언어로 명명되어 사용되는 실용태로 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는 실용태를 근거로 하여 추정하게 되는데 이를 추정태라 한다. 추정태에는 그 자체 본

질을 잘못 이해하거나 편향된 지식이나 가치관이 개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개화기의 신문지는 언론으로 명명되지 않았다. 언론을 구성할 수 있는 매체로 본 것이다. 방송 역시 일제하에서는 언론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해방후 대중보급이 이루어지고 공중의 여론 수렴 창구가 되면서 언론으로 명명되기 시작했다. 이럴 경우 언론으로 인식이 성립되지 않은 실재에 대하여 그 이후의 실용태 개념으로 유추 규정하여 명명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III. 매체의 계보

언론의 영역 설정을 위하여 먼저 언론, 출판, 정보의 관계를 먼저 제기하는 이유는 이들이 매체를 통하여 상호 접합하고 있고 일정한 부분은 오해로 인한 혼돈이 야기된 점도 있기 때문이다. 상호 관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언론의 영역 규정이 보다 원만하게 된다. 한국의 근대 언론 출판 정보는 모두 개화기 이후 매체를 통하여 성립되지만 개인 또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상당한 기간동안 각성이 늦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정보라는 말은 개화기의 외국 사조 수용과 함께 information이라는 말이 영문으로는 사용된 흔적이 있으나 일제가 “정보”라는 말을 만들어 일반화하는 1920년대가 되기 이전까지는 “통지” 또는 “사정의 전달” 등의 표현으로 모호한 상태로 있어 왔다. 신문 잡지 방송 등 대중매체가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동안에 야기된 이러한 문제는 심각하게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디지털 융합 시대에 언론상(言論相)의 설정 문제에 직면하면서 상당한 혼란을 가져왔고, 언론 관계 법제에서도 수정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언론, 출판, 정보의 생태 구성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은 매체의 특성을 먼저 이해하는 일이다. 매체가 없다면 어느 것도 가능하지 못하며 매체는 의사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언론 출판 정보를 담는 기능을 한다. 매체는 인간의 지혜 각성, 실용화, 취향에 따라 부단히 새로운 공학기술 요소가 첨가되면서 계보를 이루어 개발되어 왔다.

언론, 출판, 정보와 관련한 매체를 인간의 지혜 각성과 사회의 변동에 따라 다섯 가지로 계보화 할 수 있다. 언론상의 형성 과정을 보면 매체의 종류에 따라 변화가 이루어져 왔으며 실제로 언론이라는 말이 사용된 실용태와 사용되지 않았지만 언론으로 규정할 수 있는 추정태로 해석해 볼 수가 있다.

매체는 인간의 표현 활동을 담는 매개 수단이다. 매체란 물리적 의미도 있지만

그 자체로 이미 사회성을 수렴하여 생명을 내재한다. 매체를 보면 이를 사용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살아가는 사회의 언지양식(언지양식: communication mode)을 읽을 수 있다. 매체가 사회문화적 성립에 따라 가지는 상대성을 매체 생태라 한다. 매체생태는 담는 문법, 양식, 물리적 특성에 따라 제 1, 2, 3, 4, 5매체로 구분할 수 있다. 제 1매체는 커뮤니케이션에서 자연물 그 자체를 이용하는 양식이다. 가장 원시적이며 인간의 구성 지혜가 아직 미망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시대에 이용된 실물들이다. 제 2매체는 소리 신호 기호 그림 등 조형성이 보다 가미된 매체이다. 공동체의 조직 관계를 중심으로 공유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의미도 전달하지만 아직 체계적이지 못하다. 언론, 정보의 양식이 있었지만 언론 정보에 대한 각성의 정도는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제 3매체는 언어 문자중심의 언문 매체이다. 언문 매체의 활용은 인간이 창조한 문화를 지식과 정보로 누적 가능하게 하였다. 언문 매체의 상용화로 비로소 언론, 정보의 인식이 체계화되고 출판도 발생한다. 체계화되고 일정한 표현문법을 가지며 사회에 따라 전승한다. 제 4매체는 대중매체이며 대량 구체화된 사회에서의 수단이다. 언론, 정보, 출판이 체계적으로 제도문화를 이루는 시대이다. 제 5매체는 사이버 매체이며 인터넷, PDA, 모바일 폰 등 전송과 수신 단말기가 분리되어 있고 디지털 공학기술에 기초한다. 제 3매체 시대의 언론이 새롭게 변환된 모습으로 현재 실용화되고 있다.

이러한 매체들을 동양과 서양으로 나누어 계보화 해볼 때 “언론” 현상이 나타난 것은 제 3매체인 언어 문자 대중화 시대에 공통된 현상이지만 인간관과 사회관에 따라 다르게 정착하면서 제도화 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서양은 언론 출판 정보의 사회적 실용화에 따른 자유가 핵심주제가 되어 왔지만 동양에서는 개인의 심성 각성과 수행에 의한 인본성의 달도(達道)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면서도 이를 자유와 평등이라는 보편적 원리에 입각하여 사회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서양보다 늦게 이루어 졌다.

말은 공동체의 공통된 매체가 되지만 문자는 특정 계층이 점유하는 특정 수단이 되어 지식과 정보를 특정 계층이 공유하는 시대를 지나게 되는데 근대적 언론 출판의 특성은 이러한 계급화된 사회로부터 인간 평등이 지배하는 사회 구현에 누구나 참여하는 수단으로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국을 비롯한 동양의 국가들이 서양의 근대성을 수용하는 과정에 언론의 제도화는 바로 이러한 점을 전제하여 진행된다.

다양한 매체가 다양한 양상으로 사회에 보급되어 정보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것은 사회의 다원성에 기여할 뿐 아니라 인간이 개별적으로 가져온 개체성의 사회적 실천을 성취하는 길도 된다. 다섯 가지 계보의 매체 중에서도 제 3매체 이

후 제 4매체로 진입하면서 언론 출판 정보의 혁명과 함께 시민사회의 출현을 보게 된다. 이 사실은 서양이 동양보다 인본성을 한 단계 앞서 실천한 소치이기도 하다. 제 4매체로서의 신문, 방송, 잡지, 영화 등 공학기술을 응용한 아날로그 매체는 기존 정보 의견의 유통 혁명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자유와 권리 신장에 중요한 감시자, 보루 뿐 아니라 국가의 질서를 경계하는 제 4부의 역할까지 하게 된다.

제 5매체인 사이버 매체 계보는 제 1, 2, 3, 4 매체 계보의 기존 커뮤니케이션 체계에 근본적인 혁명을 가져온다. 디지털 공학기술 원리에 의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지구촌 전체를 정보 권역화 한다. 개인의 자유로운 참여와 교류가 양방향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제 4매체의 질서와 함께 제 5매체는 새로운 양식을 구사하고 현실과 가상 공간이 동시에 융합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제 4매체까지 구축해왔던 언론 출판 정보의 제도화에 대한 개선과 혁신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너무나 빨리 변혁이 일어나고 있으며 실생활 속에서 실험하고 검토할 시간도 없이 가속적으로 표현 질서의 변혁이 오고 있다.

IV. 서양의 speech, press, information 생태와 계보

우리 사회에 서양의 언론 출판 자유가 소개되고 헌법이나 사회 연구에서 소개 또는 제도화된 부분을 살펴 보면 “speech”는 “언론”으로, “press”는 “출판”으로 번역되고 있다. press는 그후 정기간행, 신문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한국의 언론 출판을 재검토해 보기 위해 먼저 서양의 사상적 구축 계보를 살펴보기로 한다.

근대적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의 가장 원형은 그리스에서 출발하여 18세기 영미 대륙의 시민 사회 성립과 함께 제도적으로 정착하게 된다.

플라톤의 <공화국>에서는 공동체(community)의 원만한 성립에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가 보장되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시민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정치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보장되었다. 단지 여성과 노예의 참여가 사회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 이 당시 언론이란 연설, 토론, 논쟁 등이 모두 포함된 개념임을 추정해볼 수 있다. 수사학은 지식의 생산에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은 수사학적 기교에 의한 무지의 각성이다. 인간은 이성(rationale)을 가지며 이는 언론(speech)에 의한 자기 각성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중세는 신에 대한 예종이 심화되면서 인간의 창조성·가능성의 발견과 이의 실천을 오히려 후퇴시켜 놓았다. 신의 섭리를 전수 받아 실천할 수 있는 성직자만이 이성의 합리적 실천을 할 수 있는 계층이 된 것이다. 인간 상호간의 교류나 언론에 의한 합리성과 계몽에 의한 무지의 발견보다는 신의 섭리를 따르는 계율의 실천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 중심의 언론의 역할은 퇴보하게 되었다.

종교개혁과 르네상스의 촉진과 함께 출판과 언론 혁명이 전개된다. 구텐베르그의 금속활자 발명은 성직자, 수도승 등에 한정되었던 성경과 지식을 대중화 할 수 있는 계기를 열어 놓는다. 귀족을 비롯한 특정 계층 향유의 지식이나 정보가 점차 확산되는 시대를 맞이한다. 시민 사회의 형성 과정에 인간의 표현 활동은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와 출판의 자유(freedom of press)로 이원적으로 제도화된다. 인간의 표현은 말하기(speaking)와 쓰기(writing)를 본질로 한다.

언론의 자유는 영국의 의회를 중심으로 투쟁의 역사가 전개된다. 언론(speech)은 왕의 통치권에 속하는 것으로 의회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발언이 가능했다. 웬트워드(Peter Wenterworth)는 의회 내에서의 언론 자유에 대한 면책 특권을 얻어내는 데 공헌한 인물이다. 언론의 자유는 공중이 언어 문자를 이용하여 의사를 표현하는 자유이며 명예혁명 이후 사회적인 차원에서 정착된다. 밀(John Stuart Mill)은 <자유론(On Liberty)>에서 토론(discussion)의 자유론을 전개하는데 언론의 자유의 구체화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서양에서 출판(Press)이 제도화 해온 생태를 살펴보면 printing press, newspaper press, periodical press 등으로 계보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언론’으로 번역해버리는 것은 문제가 된다. press가 무엇을 지칭하는가에 따라 대응하는 의미에 적합한 어휘로 번역해야 한다. 구텐베르그 금속활자 발명은 서양의 종교개혁과 근대성 실천에 핵심적 역할을 맡는다. 우선 도서의 간행은 지식의 대중 보급에 기여하게 되는데 인쇄 출판(printing press)을 말하며 절대왕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통제가 가해진다. 밀턴의 “출판의 자유를 위한 <언론(speech)>”은 인쇄 표현에 가해지는 속박에서 벗어나려 한 것이다. 시민 사회의 성립 과정에 정보와 의견 전달을 위한 정기간행물이 간행되는데 newspaper press이다. newsbook, tract(소책자), newsletter 형식으로 간행되다가 정기적 간행이 이루어지면서 신문으로 정착하게 된다.

서양에서 freedom of speech와 freedom of press는 제각각 전통을 구축해오고 있으므로 양자를 모두 언론의 자유로 인식하고 번역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언론이라는 공통성은 내재하고 있지만 매체의 특성을 살린 이름을 그대로 사

용해야 혼돈을 피할 수 있다. press는 정기간행물 또는 신문의 경우 opinion과 information을 동시에 내재하기 때문에 언론으로 단정해버릴 수는 없다. 신문 잡지와 같은 정기간행(periodical press)은 편집에 의하여 언론이 성립되는 양식으로 언론의 기능은 내재하지만 언론으로만 한정할 수는 없다.

V. 한국 언론 출판 정보의 계보

언론의 규정을 위하여 먼저 당시 언론 개념의 활용을 계보화 해보기로 한다. “언론”을 언급한 근거는 이미 기층적으로 있어온 언론 개념의 활용과 개화기의 언론 개념, 그리고 영미의 speech, press와 대비가 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한문 활용에서부터 있어온 기층 언론과 개화기 이후 성립되는 근대 언론의 생태를 관찰해 보기로 한다.

개화기의 외래어 번역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사회적 인식 간극 역시 대단히 컸음이 입증된다. speech, press와 신문잡지 간행의 제도화와 상호 계보 관계를 생태구성의 시각에서 재음미하면서 독립신문의 출판과 실제로 기사화된 언론 개념을 연관지어 분석해본다.

용례를 중심으로 추정해보면 개화기에 speech는 언론으로 press는 출판 또는 신문 출판으로 번역하였다. 서재필의 독립신문 역시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음이 기사에서 입증된다. 서양의 speech와 press를 엄두에 둔 것으로 판단된다.

언론이라는 말은 장구하게 통용되어온 어휘이다. 개화기에 speech 사상이 전래되는 과정에 언론으로 번역되면서 형식은 전통을 전수하고 본질은 서양의 근대 speech를 따르는 전환기적 생태 변환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동양에서 “언론”의 특성은 의사 표현 방법 중 가장 철학적이고 논리적이며 체계적이다. 언어로 표현하는 행위 중에서도 언론은 가장 정수성을 띤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서양에서 공공성을 띠는 speech를 언론으로 번역한 것은 기저의 인식론적 유사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기반언론

기반언론이란 서양의 free speech, free press 사상 수용 이전에 토착화 되어온 언론 개념을 말한다. 기반언론의 용례를 살펴보면 “言論”이라는 외형적 형식은 동일하지만 실제로는 철학적 의미가 다른 용례로 계보화해 볼 수 있다.

전통적 삶의 기층에 사용되어온 기반 언론의 생태는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한자로 사용된 언론 개념과 실재이다. 한자로 사용된 언론 개념은 형식, 본질, 제도화를 중심으로 분석 대비가 가능하다. 기반 언론의 계보는 인간, 세간, 세계(당시는 자연이라는 말을 쓰지 않음)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는가에서 출발한다. 당시 “언론”이란 형식면에서 볼 때는 논리적 체계를 갖추어 언어 문자로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언설, 언사, 담론, 평론 등 언론에 준하는 말은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으나 언론은 이러한 표현활동 중 가장 공식적이고 철학적이며 논리적인 체계를 갖춘 언어 문자의 구사를 지칭한다.

언론의 용례는 중국의 문헌에서부터 조선 시대로까지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다. 논어의 주해편, 朱書百選 등에서 言論은 언어에 의한 표현 행위를 의미하며 성리학적 시각에 입각한 언어 표현이나 조정에서의 공론을 지칭한다. 조선 시대 남당 한원진은 『주자언론동이고(朱子言論同異考)』를 집필하여 주자가 논한 바를 대비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言論이란 형식면에서는 철학적 체계를 갖춘 언어 문자의 표현 행위를 말하지만 본질에서는 성리(性理)의 세계를 논구함을 말한다.

외형적으로는 조선 시대의 조정에서 대간의 공론 활동이나 경연에서의 군신간 토론 및 간(諫)의 행위를 言論으로 명명하며 공식 논의의 형식이 될 때 公論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연구는 이미 다수의 학자에 의하여 시도되어 왔고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집권하는가에 따라 대간의 언론 성격의 철학적 본질은 달라지는데, 조선 시대는 그 이념을 유교 또는 성리학적 기반에 두고 있다.

불교 철학에서의 언론은 형식면에서는 성리학의 경우처럼 역시 철학적 논리와 체계를 갖춘 언어 문자의 표현 행위로 규정될 수 있지만 본질에서는 전혀 다르다. 고려대장경을 근거로 할 때 言論의 용례는 30회 이상 찾아볼 수 있다. 신라의 원측은 해심밀경소에서 “론(論)”을 “言論”으로 정의한다. 불교철학에서 언론의 본질은 언어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일시적이어야 하며 그러한 규정 행위에 고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부단히 강조한다.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하여 일시적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언어 문자에 의한 구성이 실재와 동일시 될 수 없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고 떠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한다는 입장이다. 언어로 구사되는 언론은 궁극적으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본질적인 수단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기층 언론은 인식론적 본질에서는 다르지만 언어 문자에 의한 체계적 의사 표현 내지 평론함이라는의 형식면에서는 공통성을 가진다.

○ 대중언론

대중언론이란 근대성 수용과 함께 개화기 이후 우리 사회에 정착하게 되는 free speech, free press 사상에 기초하여 제도화된 언론을 말한다.

서양 근대 사조의 동양 전파는 다양한 실재로 표출되고 그 대표적인 한 가지 사례가 언론출판에도 나타난다. 서양의 free speech, free press 전통이 중국과 일본에 소개되면서 언론 개념은 새로운 생태 변신이 시작된다. 이로부터 speech는 언론으로 press는 출판(또는 신문)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어느 나라에서 먼저 시도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본이나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유추된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신문 잡지를 “언론”으로 지칭하는 사례는 적어도 1900년대 전기까지는 없다. 개화기의 신문 잡지 현상을 “언론”으로 명명하여 단정하는 사례를 빈번하게 보게 되는데 실제 활용 사례 등을 생태구성의 시각에서 대비하여 당시의 언론 개념을 분석해볼 수 있다.

분명한 사실은 개화기에는 신문을 언론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용례에서 보면 당시 언론은 영어 speech 범주에 준하여 언어 문자 표현으로서의 언론, 즉 기층언론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이 함축하는 본질은 다르다. 필자는 이러한 개화기의 언론 현상에 대하여 “한국언론계보론”에서 언어 문자의 표현 행위를 언론으로 명명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독립신문 한글판에는 “언론”을 사용한 기사가 15건 이상 된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언어 문자의 표현 행위, 즉 영어로 "speech"에 해당하는 말이다.

이외에도 언론이 speech에 준함을 당시의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찾아볼 수 있다. 서재필이 독립협회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하여 독립신문 영문판(1896. 10. 27)에서 freedom of speech를 주장하는데 이 때 speech는 공중이 자유롭게 발언 토론함을 의미한다. 유길준의 서유견문에는 신문지와 언론의 근거가 별도로 소개되고 있다. 유길준의 서유견문 제4편 인민의 권리에서 “언사(言詞)의 자유”는 freedom of speech를 말하며 뒤에 발표하는 『정치학』에서는 “언론의 자유”로 개념을 바꾼다(유길준전서 편집위원회, 1996). 여기서 언사, 언론은 발언을 말한다. 게일(James Gale)이 편집한 『한영조년(1897)』에서는 론설(의론, 말슴)을 a speech, an editorial로 번역한다. 이외에도 당시의 중등 학교 교과서에서 언론은 발언으로 의사를 표시함을 말한다. 개화기 잡지의 경우 “평론”을 “언론”으로 쓴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신문의 경우 논설인 평론이나 의견을 언론으로 지칭한 것으로 보이지만 신문지나 신문 편집을 언론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흥사단창립취지서에서 언론은 발언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뿐 아니라 일제의 경우에도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의 언어 문자 중심 의사 표현 행위를 언론으로 규정함은 여러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東洋自由新聞에서의 “언론의 자유”는 언어 문자로 사상을 표현함을 말한다. 신문을 언론으로 지칭한 사례는 적어도 1900년대까지는 없다. 그러나 일제가 1900년대 이후 언론계, 언론기관 등 신문의 언론 활동을 신문 잡지 등의 매체 중심 호칭 대신 쓰기 시작하면서 <신문(press)=언론>이라는 인식이 고착되기 시작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언론으로 규정하는 경우를 실태중심으로 살펴보면, 실제로 언론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계보가 성립되는 규정태의 경우와 언론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후에 추정하여 명명하는 추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는 규정태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사전과 실용 사례를 종합하여 보면 독립신문을 비롯한 당시 신문 현상에서 몇 가지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언론이 서양의 press 보다는 speech에 착안하여 번역되고 인식이 구축되어 왔다. 둘째는 speech의 언론 규정은 형식면에서는 기층적으로 있어온 언론 개념의 범주를 계승하고 있으나 본질에서는 서양 근대성을 지향하는 전환기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개화기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는 그 초점이 신문 잡지의 편집이나 매체 자체 보다는 인간의 언어 문자 중심의 의사 전달 행위에 더 맞추어져 있다. 셋째는 신문에서의 논설은 평론이며 언론에 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넷째는 신문의 언론 기능이 점차 부각되면서 정보의 기능이 각성되지 못해 생태구성이 편향화되어 버렸다. 이 때문에 언론과 정보의 기능을 병행하여 살리지 못했고 인쇄매체의 정보 기능 전통마저 살리지 못하게 되었다. 신문을 언론으로 규정하는 축소 명명은 일본의 제국주의화가 진행되면서 신문의 표현 행위를 점차 언론으로 부각시키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일제하에서 언론계, 언론기관이라 함은 신문이나 잡지를 편집 제작하는 조직 또는 기관(신문사)을 말한다.

○ 다중언론

언론이 매체를 통하여 성립되는 것이라면 매체의 양식에 따라 언론이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 오늘날과 같은 사이버 시대에 언론의 새로운 영역 설정을 가능하게 하는 타당성을 찾아볼 수 있다. 다중언론이라 함은 디지털 기술 원리에 의하여 텍스트의 구성이 복합적일 뿐 아니라 다수의 공중이 동시에 양방향으로 참여하여 의사표현이 성립되는 활동을 말하며 인터넷 언론 또는 사이버 언론이라 할 수 있다. 다중언론은 기반언론과 대중언론을 동시에 접합할 수 있다는 점에 중요한 특성이 있다.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사이버(가상) 공간은 새로운 공론장(public sphere)으로 등장한다. 과거의 통신이 사적 영역으로만 남아 있던 전통에 비하면 혁명적임에 틀림없다. 가상공간에는 기존 신문, 방송, 잡지 등의 양식이 그대로 전달될 뿐 아니라 인터넷의 잠재성을 살린 새로운 언론이 형성된다. 인터넷의 고유한 편집과 담론 양식을 갖춘 인터넷 신문, 인터넷 잡지, 포털 유스 사이트, 대화방, 토론방, 공공 사이트 등 공적 성격을 띤 다양한 언론 양식이 출현한다.

말하기, 쓰기, 그림그리기 등은 가상공간에서 전자적 양식을 띤다. 취재와 구성에서도 고전적 양식을 벗어난다. 그러나 아직 부가가치 통신으로만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게재와 삭제, 책임성 여부 등에 대한 근거가 거의 없다. 문어적 기교에서 구어적 기교로 가상공간에서 고전 언론의 변용된 형태로 새로운 공동체 내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인터넷 언론 양식은 기존 정기간행물 중심의 대중언론 규정 논리를 적용하면 언론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기반언론 성격을 적용하면 인터넷에서의 공적 언어 문자 표현 활동을 언론으로 규정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 문자, 음성, 영상, 데이터 등을 요소로 하여 언론의 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이상은 언론이라는 어휘가 우리 사회에 정착하여 개념 변환이 진행되는 현상을 생태구성의 시각에서 계보화 해본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언론은 (1) 철학적이고 논리 체계를 갖춘 언어 문자 중심의 표현, (2) 비평, 비판하는 등의 평론, (3) 공식적 발언이나 연설, (4)신문 잡지의 편집 표현 행위 내지 대중 매체 자체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1) (2) (3)은 영어의 speech에 준하는 영역으로 개화기까지도 하나의 계보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4)의 press의 영역이 1920년대를 전후하여 언론으로 대중적 명명이 관행화하면서 그 이후의 계보는 모호해지기 시작했다.

한국의 기반 언론은 형식면에서는 (1), (2), (3)의 의미로 통용되어 왔다. 개화기에 사용되는 言論이라는 말은 서양의 speech를 언론으로 엄두에 두면서 형식으로는 기층 언론의 양식을, 본질에서는 서양 speech를 지향한다. 의미의 계보로 보면 (1) (2) (3)중심으로 언론(speech) 개념이 사용되고 (4)의 시각은 거의 형성되지 않음이 입증된다.

해방이후 신문 방송이 사회 여론을 주도하는 매체로 위상이 설정되면서 언론은 점차 press를 언론으로 규정할 뿐 아니라 다양한 한자 어휘를 언론으로 번역하여 혼돈을 초래한다. mass communication, mass media, journalism, communication, discussion 등 모두를 언론으로 번역해버린다. 실로 언론 개념의 혼돈 시대를 초래한다. 1980년 언론 기본법에서는 신문, 방송을 언론으로 명확하

게 규정해 버린다.

여기에는 정기간행물인 press를 언론으로 번역하고 일상화 하면서 기존 speech의 위상은 모호해져 버린 측면이 있다.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기반언론의 전통으로 돌아가 인터넷 시대 언론을 다시 체계화 할 필요가 있고 인터넷 언론도 이러한 전통에 입각한 계보로 해석할 때 아무런 이견의 여지가 없다.

○ 정기간행물과 정보관

한국 사회의 정기 간행물에서 information관이 토착화되지 못한 것은 제도화에서 크나큰 생태적 약점이다. 한국 사회에는 일체의 정보관이 이식되기까지 information, intelligence에 대한 분명한 시각이 없었다. “정보”라는 말은 일본에서 조어진 어휘이며 1903년 이후 더 명확하게 사용된다. 일본 내에서도 information을 “통지”, “지식” “정보”로 혼용하는 기간이 있었다. 중요한 점은 그들이 서양의 신문 제도를 수용하는 과정에 분명한 정보관에 입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명치 100년의 근대사를 회고하면서 신문의 기원을 정보 또는 정세보고에 두고 있음을 지적한다.

서양에서 information이 신문에 도입된 배경은 통지(to inform) 행위에 근거한다. 이러한 관행은 영국의 경우 이미 1640년대 내전과 함께 시민 사회로의 변환 과정에 출현하는 신문 매체 양식의 본질을 information 전달에 맞추었다. 근대 신문은 information과 의견(opinion)으로 구성된다.

신문에서 정보가 핵심이 된다는 인식은 우리 사회에 전파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등한시하여 체계적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본식을 배운 언론관으로만 편중되기 시작한 것이 문제이다. 서재필의 독립신문 창간은 정보관의 도입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근대 언론으로서의 효시만 강조되고 있을 뿐이다. 독립신문 창간호 사설에는 “정보”를 전달한다고 하여 information 어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신문 구독을 알리는 영문 광고에 약 300회 가까이 사용한다. 서재필은 미국에서 12년간 생활을 하면서 서양의 정보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졌음에 틀림없다. 배설의 대한매일신보 영문판에서도 information은 사용된다.

information을 사용한 가장 효시는 1885년 윤치호가 중국에서 써서 국내로 보낸 편지문에서 중국신문과 information의 관계를 서술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본다면 press는 언론으로만 번역되는 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선각자들이 사용하고 소개한 information관이 국내에서는 등한시되어 해방이 되기까지 모호한 상태로 남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VI. 언론 피해 발생과 중재활동

언론의 영역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중언론으로까지 확대 설정한다면 언론 중재 제도 운용도 이에 따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언론중재 제도는 1980년 언론통폐합조치로 언론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한 반론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발상에서 출발한다. 이재진은 <2003 언론중재제도 만족도 연구>에서 “언론 보도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가 해당보도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조건없이 보도해줄 것을 해당 언론사에 요청하는 경우 이의 해결을 중재하는 준사법적 피해구제제도”로 정의한다.(p.23) 80년대 당시로서는 표현매체 중심으로 축소 지향되어 버린 경향이 있으며 이를 제3매체의 공중으로서의 의사 표현으로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바로 그러한 표현 체제에서 응용된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 사회 안에서 전부의 자유(freedom)를 이상적으로 향유하여 인간다움의 구현을 열망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사회 또는 공동체의 규모 안에서 자유를 실천하고 보장받기 위하여 협약과 공감대에 기초한 계약에 의하여 보장되는 자유(liberty)로 freedom 실천을 사회 내에서 보장받는다. 인간이 비록 이성을 가진 존재라 하더라도 완성형의 성숙 상태가 아니며 이로 인해 인간 사회적 관계에서의 불확실성을 규정하고 규제하여 사회 내에서의 구성원 상호간의 자유 실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사회적 유대나 관계의 지속을 위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면서 매체가 필요하며 인간과 매체의 표현 사이에는 부단히 불확실성을 내재한다. 거대한 조직을 갖춘 매체의 표현이 공중 속에서 유포되고 이로 인한 개인의 자유나 인격이 침해당할 때 국가는 개인을 보호하고 피해에 대한 구제를 지원할 책임을 진다. 여기에 피해의 발생과 언론 중재의 성립이 타당성을 가진다. 언론 중재는 피해 공중으로서의 개인(또는 준하는 법인, 단체)과 언론사간 초래되는 비평형적 불확실성의 증폭 상태를 양자간 조정에 의하여 해소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활동이다. 양자간에 야기되는 갈등이나 분쟁의 조정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표현자의 의사 구성 행위가 고의적 또는 우발적으로 당사자에게 훼손이나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성립된다. 중재는 표현자와 당사자간의 견해 조정에 의한 공동 합의의 도출과 상호 약속의 실천(반론, 또는 정정)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면에 합일점에 도달하지 못할 때 중재는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중재에 가장 많이 제기된 문제로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요인으로는 (1)취재원에

대한 소극적/편향적 접근, (2)기자나 프로듀서의 선입관 내지 고정 관념, (3)기사 구성에서의 개인적 또는 조직의 언어 구사 스타일, (4)언론사에 누적된 다수 가치관, (5)취재에서 자료의 수집과 판단력, (6)편집 과정에서의 비의도적 축소 등이 다,

당사자는 자신의 입장을 매체의 기사를 통하여 접하게 되고 적어도 이상과 같은 요인으로 인하여 의사 표현이 굴절되어 형평성이 배제되었다고 판단할 때 중재 요청의 가능성은 성립된다. 이러한 언론 행위로 인하여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하여 현행 중재 제도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중재 기준을 설정한다. 첫째는 오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바로 잡음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의 정정보도 요청이다. 둘째는 일방적 주장에 상응하는 대안으로서의 균등한 의견 개진을 요구하는 반론보도 청구이다.

중재 제도의 운용에 대한 일반적 이미지는 이재진 교수의 설문 연구 결과에서도 읽을 수 있다. 만족하는 수준이 34.6%, 불만이 34.8%이어서 중재 결과가 기대만큼 원만하게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중재의 불성립에 대한 정기간행물사의 과실 부인이 51.4%, 반론문 게재 거부인 경우 31.4%가 된다. 응답자의 82.8%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됨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언론의 자유 보장 환경과 걸맞게 중재 제도의 보다 탄력 있는 제도 운용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중재 조직 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근직이어서 중재위원회의 업무 확대와 중요성에 비하면 오히려 소극적 기능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장관직에 준하는 상근직으로 하여 조직의 업무 장악과 탄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중재 과정에서 절차의 강화이다. 현재 중재 처리는 대단히 소극적이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시하는 증빙 자료에 근거할 뿐 적극적 실증 자료 수집을 독려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

셋째는 언론의 피해를 소비자 보호로 확대하여 시정권고 기능을 보다 심화할 필요가 있다. 정기간행물을 언론으로 보는 입장을 정보, 의견으로까지 확대하여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시정 권고 활동을 심화할 필요가 있다. 대중매체나 인터넷 매체의 표현물은 상품으로 간주되어 산업화 차원에서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이며 이러한 시각에 맞추어 중재 기능도 보완이 필요하다. “시정 권고” 보다는 “윤리 준수 권고”로 규정하는 착안을 해볼 수도 있다.

넷째는 지역 사무소의 중재 홍보 활동 강화 대책 수립이다. 중재를 신청하는 다수의 신청인이 가지는 심리적인 두려움은 중재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오해이다. 중재 기능과 절차에 대한 홍보와 병행하여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교양과 대중

매체의 위상에 대한 논의도 병행하여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는 다중언론(인터넷 언론)의 피해 구제에 대비한 심도 있는 대책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터넷 언론은 이제 초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편집의 다양성, 프라이버시, 윤리,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중재 대책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

VII. 언론 중재 활동의 확대 규정

인간의 언어 문자 표현이 반드시 사회성에 충실하지않은 않아 원만하지 못할 수도 있다. 신문이나 방송이 높은 이상을 내걸고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하나의 표현 수단으로 정착한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것이지만 매체의 표현행위가 편집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표현될 때 사실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공중으로서의 개인이 표현하는 의견이나 사실이 언어 문자 영상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구성될 때 부단히 거리감이 발생한다. 현재 언론 중재의 근거는 “언론 보도”라는 범위 내에 한정하지만 이를 시대 인식에 맞게 확대 해석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대책 모색이 요구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규정해온 법적 용어도 언론중재 이전의 모법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의견(opinion)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의 확대 적용이다. 서양에서 신문을 비롯한 정기 간행물이 정착하는 생태의 과정을 보면 먼저 information이 기본이 되고 점차 opinion으로 확대하여 두개의 축으로 정기간행물의 구성이 성립된다. 의견의 제시가 일방적이 아니라 형평성을 유지하여 다원성을 살릴 수 있도록 반론 참여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반론 보도의 기회가 성립되는 것은 타당하다. 반론보도청구권이란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공표된 내용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발행인이나 편집자에 대하여 그에 대한 변론을 무료로 게재(방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박선영은 정의한다.

둘째는 용어의 해석 문제이다. 정기간행물법이나 방송법에는 “보도”라는 개념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정기간행물법에서는 “언론 보도”로, 방송법에서는 “보도 교양 오락” 등으로 편성을 구분한다. 보도는 뉴스와 같이 사실을 전달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보도의 원형은 다르다. 영국에서 1640년대 이후 신문이 정착하는 과정을 보면 신문은 “to inform”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그 명사형이 information(알림 또는 정보)이다. “알려주다”, “통지하다”, “보도하다”의 뜻으로 일본에서 번역 사용되어 오다가 보도로 되었다. 뉴스는 정보 뿐 아니라 의견도 본질로 한다. 우리 사회의 경우는 정보라는 말이 주로 첩보 시각에서 일제이후 정착하기 시작했고, 이

런 정보개념에서 출발했기에 1960년대까지도 신문이나 방송을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 해석한다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은 어법으로 보였다. 우리 사회의 대중매체는 일본의 경우와는 다르게 이때부터 이미 정보관의 구축이 아예 결여되고 언론으로만 사회적 인식이 구축되어 버렸다.

셋째는 언론 개념의 포괄적 해석과 인터넷 언론 개념 규정의 재검토이다. 앞에서 매체 부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언론은 매체의 양식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왔고 매체의 특성에 따라 신문, 방송, 인터넷 등으로 호칭되어 왔다. 문제는 이러한 매체 양식을 포괄하여 “언론”으로 명명하는 경우 공중이 가지는 언론권(right to speak)의 위상은 모호해져 버린다는 점이다. 공중의 언론권은 가장 기초가 되며 언론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편집권도 반론권도 의미가 없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볼 때 “언론” “정보”등은 사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개념이며 재평가가 필요하다.

넷째는 규제와 보호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 가능성이다. 방송의 경우 공업선진국의 시각을 보면 규제보다는 보호에 더 치중한다. 그 이유는 방송의 존재 양식이 공영 중심에서 민영 확대로 나아가면서 방송이 언론의 속성과 함께 문화상품으로서의 속성도 동시에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양자의 차이는 규제가 개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 성격이 짙지만 이에 비하면 보호는 개인이나 공중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차단 장치의 장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활동은 규제의 전통이 핵심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공업선진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보호의 차원에서도 중재를 연계해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제4, 5매체의 사회적 제도화 동향은 소비자 보호 차원으로 법제화하고 있고 중재 역시 이러한 취지를 확대 해석하는 시도도 가능하다.

VIII. 결론

본 발제는 공동 논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착안하여 구성되었다. 첫째는 언론이 우리 사회에 대중적으로 정착한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상당한 의미의 편차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 우리의 언론 출판 정보의 관계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있다. 신문 방송 등과 같은 대중매체 중심로의 인식 편향은 공중이 의견 표현을 하는 자유, 즉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 위치를 모호하게 할 뿐 아니라 새롭게 조성되는 인터넷 중심의 표현 행위를 언론으로 규정짓는데도 상당한 혼돈이 야기 될 수 있다. 매체는 공학기술의

개발에 따라 제5매체인 디지털 다중매체로까지 개발되어 왔고 언론 양식은 매체의 계보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언론의 어휘 사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성립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형성되는 공론장을 언론으로 규정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제도적 대책과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부가가치 통신으로 규정하여 아직도 어느 영역까지 어떠한 시각에서 언론으로 규정할 것인가 하는 제도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확립되지는 않았지만 표현과 함께 윤리적 책임이 부가되는 보완이 필요하다. 인터넷 언론의 경우 제3, 제4 매체의 언론 양식을 수용하여 독특한 제5 매체로서의 언론 양식을 구성하기 때문에 기존 언론관이나 대중매체에 대한 시각을 연장하면서도 그 자체로서의 특성을 살린 언론 규정이 바람직하다.

셋째는 언론중재의 성격을 제3 매체로부터 제5 매체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시도와 이에 따른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신문 방송 등 제 4매체 표현 중심 언론 중재의 성격 규정은 상당히 축소지향적이며 매체의 특성과 새로운 매체의 발생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시대에 부합하는 중재제도로 확대 개편하는 것은 제도적 기능 문제의 확대 강화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언론 철학에 기초한 타당성의 확립에도 기여하게 된다. 제5 매체 언론인 인터넷 언론의 규정의 연원은 제3 매체의 디지털 시대에 따른 변용형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넷째는 외래의 언론 사조 수용과 개념의 번역 적용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speech와 press의 번역 혼돈, editing과 programming, information의 “보도”로 번역, mass media, mass communication, journalism 등을 “언론”으로 번역하는 일은 제도적 기반에까지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문제를 유발하며 무엇을 언론으로 볼 것인가는 보다 구체적 보완 논의와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은 언론중재의 영역과 성격 설정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